

### Ⅲ. 최신 환경 단신

#### ◎ 정유·화학공장, 독성물질 배출량 자율 보고해야 (서울경제신문, 98/08/07)

앞으로 정유·화학공장은 암과 불임 등을 유발하는 벤젠과 페놀·톨루엔 등 독성물질의 배출량을 스스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TRI, toxics release inventory)'를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석유정제, 화학업종 가운데 연간 50t 이상 유독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1백명 이상인 120여 사업장은 대기나 폐수, 폐기물을 통해 환경으로 누출되는 양을 환경부에 자율 보고해야 한다.

TRI 시범 실시대상에는 SK(주), 한화에너지, 한화중합화학, LG화학, LG-칼텍스, 현대정유, 쌍용정유 등 7개 업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발암성, 생식 독성, 유전 독성을 지녀 국제적인 유해화학물질로 인정된 벤젠, 톨루엔, 황산, 메탄올, 페놀, 질산, 에탄올 등 80종 가운데 국내에서 연간 1천t 이상 유통되는 독성물질을 1차 TRI 대상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1년간 TRI 1차 사업을 실시한 뒤 대상 화학물질을 204종으로 늘리고 대상업체도 연간 10t 이상 취급하는 회사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한편 TRI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 독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TRI를 통해 유해물질 환경배출량을 종전보다 30-40%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세계 굴지의 화공회사들은 유해물질 배출량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 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0곳 설치 (한국경제신문, 98/08/04)

경기도내에 2000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는 자원화시설 20곳이 설치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00년까지 모두 1백69억3천여만원을 들여 19개 시·군에 하루 7백30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20곳을 설치한다.

수원과 시흥시에는 올해말까지 하루 50t씩을 퇴비화하는 분뇨연계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성남, 부천, 동두천시와 양주군 등에는 11곳의 사료화시설이 각각 설치된다. 또 광명, 안산, 하남, 용인시 등에는 7곳의 퇴비화시설이 설치된다. 이

중 11곳은 자치단체가, 9곳은 농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및 쓰레기로 재활용하게 된다.

### ◎ 2004년까지 111곳에 환경농업지구 조성 (매일경제신문, 98/08/03)

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 농촌이 토양오염으로부터 벗어나 무공해 생산 터전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줄이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3780억원을 투입, 전국 111개 지역에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5개 지역을 환경농업조성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해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농업기반 모델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들 시범 사업지구에서는 농업화학 비료사용 억제,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 절감, 안전농산물 생산, 환경농산물 공동 유통·판매 등의 농업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정부의 환경농업지구 조성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를 환경농업기초확립단계로 설정하고 환경농업추진체계와 유통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또 2001년부터 5년간 환경농업보급에 적극 나서 신기술 보급·시행, 응용기술개발, 환경농산물에 대한 물류기능 확대 등을 유도한다.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안 입법예고...산자부 (한국경제신문, 98/08/18)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의 금융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낡은 시설을 바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절약 등 수요의 합리적 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협약제도가 도입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에너지절약투자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 규제개혁위 확정 1차 폐지대상제도 (매일경제신문, 98/08/15)

부처	폐지사무	내용	대상법령 및 정비일정
산자부	공장건축 기준초과용지에 대한 대리매각제도 폐지	기업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공장건축 기준 초과용지에 대한 강제 대리 매각제도 폐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8.12)
	물류 공동화사업 지정 제도 폐지	유통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물류 공동화사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지원강화 도모	유통산업 발전법(98.12)
	집단에너지 사업시행자 지정제도 폐지 집단에너지 사업시행자 지정제도 폐지	자율경쟁의 촉진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시행자 지정제도 폐지	집단에너지사업법(98.12)
	공장이전명령 및 명령위반시 설립승인 취소 제도 폐지	과밀억제 지역내에서 국방·환경 목적상 위해 방지를 위해 공업지역 외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 이전 명령하던 것을 폐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8.12)
환경부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변경 명령제도 폐지	환경관리인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관리인 변경 명령제도 폐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98.12)
	환경오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등의 신고내용 부합여부 확인제도 폐지	신고내용과 실제 설치사항의 일치여부를 파악, 결과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	대기환경보전법(98.12)

◎ 무세제 세탁기 세계최초 개발 (한국경제신문, 98/08/18)

세탁기에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년말께 세제를 전혀 쓰지 않는 무세제세탁기가 등장,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방(대표 신명수)과 경원생명과학연구소(회장 김희정)는 18일 세제를 쓰지 않고 세탁하는 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우전자와 함께 이 기술을 이용한 세탁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무세제세탁기기술은 물과 전기를 이용,물이 세탁물에 묻어있는 체지방 단백질의 분자고리를 끊어주는 계면활성제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식물추출물을 촉매로 사용해 물에 전기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언어였다고 신동방과 경원측은 밝혔다. 무세제세탁기가 상용화돼 널리 보급되면 전세계 세제업계 및 가전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원생명과학연구소 김회장은 이날 충북 음성 연구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기술개발에 91년이후 총50억원을 투자했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등 6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 ◎ [프랑스] 대기오염방지 '녹색스티커제' 시행 (조선일보, 98/08/18)

프랑스 정부는 17일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이 심할 경우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녹색 스티커]제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 관계당국은 지난 96년12월 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 및 97년 4월 마련된 동 시행령에 따라, 차량이 오래됐거나 배기가스 청정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대기중 오염이 심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키는 선별 스티커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차량의 경우 93년이후 등록된 차량과 디젤차량의 경우 97년이후 등록된 차량, 그리고 전기차량이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녹색스티커가 배부되는데, 대기 오염정도가 가장 심한 3등급(대기 1m<sup>3</sup>오존 함유량이 2백40 마이크로그램 이상) 정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이들 녹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녹색 스티커가 배부된 차량들은 전기나 LPG 차량외에 배기가스 정화장치(촉매장치)를 갖춘 비교적 신형 차량들로, 프랑스내 전체 보유 차량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7백70만대에 달하고 있다.

### ◎ 지난해 환경오염방지에 8조5천억 투입됨 (한국경제신문, 98/08/20)

지난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투입된 자금은 8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0일 "97년중 환경오염방지 지출 추계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은 모두 8조5천40억원으로 96년의 7조2천3백94억원보다 17.5% 증가했다.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6년 1.86%에서 97년 2.02%로 높아졌다.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95년 6조3천61억원(GDP대비 1.79%)에 그쳤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돈을 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4조3천

3백69억원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기업은 3조4천6백27억원을 투입했으며 가계는 7천44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부담금중 2조5백7억원은 제조업에서, 1조4천1백20억원은 비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투입했다.

한은은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 급증했던 기업의 환경투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기업 지출은 전년에 비해 2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하수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은 1조원 이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출규모를 오염매체별로 보면 □ 수질부문 4조3천4백63억원 □ 폐기물처리 2조4천9백84억원 □ 대기분야 1조3천9백82억원 □ 기타 2천6백11억원 순이었다.

한편 폐기물중 26.2%는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비중은 지난 94년만해도 15.3%에 불과했으나 95년 23.7%.96년 26.2%로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매립비중이 68.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각처리되는 폐기물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일본(73.0%),프랑스(40.0%),스위스(76.0%)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오염방지비용통계는 그린(Green) GDP를 추계하기위해 필요한 자료다. 그린 GDP는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자원고갈이나 환경파괴등 사회적 환경손실을 화폐가치로 평가,이를 국민소득통계에 뺀 지표를 말한다. UN은 93년 도입한 신국민계체계를 통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으로 환경계정을 도입토록 권고했다.

### ◎ 설문조사 결과 "기상이변 환경파괴가 주 원인" (한계레신문, 98/08/21)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양쯔강 범람 등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은 에너지 과다사용 등 인간의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장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상이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은 '에너지 과다사용'(40.4%),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배출'(30.4%), '숲 밀림 등 자연산림의 훼손'(20.7%) 등 91.5%가 인간의 환경오염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순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7.9%에 불과했다.

이밖에 기상이변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체인너지원으로는 응답자의 37.5%가 가스를 꼽았으며, 원자력 31.4%, 석탄 16.5%, 석유 8%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